

김정일과 한반도의 장래 - 평양과 서울의 경험

김용호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평양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과거 및 현존 사회주의 국가(러시아, 동구 국가, 중국, 베트남)의 주한 외교관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김정일체제의 장래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았다. 현재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 가운데 평양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분이 10 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¹⁾ 이들 가운데는 평양에서 7 년간 유학한 후 10 년 동안 외교관 생활을 한 분도 있고, 작년 봄까지 평양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분도 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평양에서 3 년 내지 5 년 정도 근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의 한반도 장래에 대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직접 평양에서

외교관으로 생활해본 경험이 있는 이들의 관찰은 우리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자국과 북한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외교 전략적으로 북한을 비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이 100%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김정일에 대한 평가

북한체제의 장래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의 하나는 김정일의 통치 능력과 정치적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정치체제에서나 최고 지도자의 능력과 성향은 정권의 장수 여부와 대내외 정책 방향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북한의 경우, 1인독재체제라는 속성과 분단 국가의 성격상 최고 지도자의 통치 능력은 김정일체제의 장래는 물론 북한체제의 장래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세계관과 대내외 정세에 대한 인식 및 개인적 선호 등이 향후 김정일체제의 대내외 정책의 방향을 가름하는 데 많은 시사

1) 러시아대사관의 Valery E. Suhinin, 중국대사관의 Bin Li와 Yanguang Jin, 폴란드대사관의 Urszula Raznowiecka, 헝가리대사관의 Miklos Lehgyel, 베트남대사관의 Le Van Cu와 Nguyen Thi Ngoc Ha, 체코대사관의 Milan Hupej, 불가리아대사관의 Atanas Mladenov, 루마니아대사관의 Andrei Maghiari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7 명과 인터뷰를 추진하였으며, 그들의 요청에 의해 구체적인 이름은 밝히지 않기로 하였다.

김정일은 성격이 급한 면이 있으나 정치적 감각과 통치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김일성이 김정일을 후계자로 선택하고, 20년간 일관되게 후계자로 양성해온 것은 단순히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자질과 능력을 깊이 신뢰하였기 때문이었다.

점을 줄 것이다. 과연 김정일이 자기 아버지의 후견없이도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지, 김일성이 사망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왜 그는 아직도 공식 승계를 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도 김일성처럼 자연적인 수명을 다할 때까지 권세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김정일은 혁명 1세대에 비해 개방적인 성향이 있으나 오랫동안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였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성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특히, 김일성에 비해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적다. 김정일의 해외 여행 경험은 많지 않은 바, 1958년 김일성과 함께 구소련을 방문한 적이 있고, 1983년에 중국을 방문하여 경제 개방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인도네시아를 다녀온 적이 있다. 그런데 김정일은 성격이 급한 면이 있으나 정치적 감각과 통치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김일성이 김정일을 후계자로 선택하고, 20년간 일관되게 후계자로 양성해온 것은 단순히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자질과 능력을 깊이 신뢰하였기 때문이었다.

그의 사생활에 있어서 다소 부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통치 능력과는 별

개의 문제일 수 있다. 그는 지난 20여 년간 승계를 위한 지도자 수업을 받으면서 주체사상 개발, 3대혁명 소조운동, 경제속도전 등을 통해 김일성유일체제를 구

축하는 데 정치적 능력을 발휘하였으며, 또한 추진력과 결단력이 뛰어나며 소신과 집념도 강하다. 예를 들면, 남포갑문 사업, 주체기념탑 건립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20년에 걸친 지도자 수업과 통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정국 장악 능력이 있으며,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례를 들자면, 김정일은 1983년 자신이 중국 경제개방구를 방문한 후 1984에 합영법을 제정하였으며, 1991년에는 나진·선봉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였고, 냉전 종식 후 대미 관계 개선 및 대일 수교 교섭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결정하고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등 대내외 주요 정책 전환에 깊숙이 개입하였다. 특히, 그가 북한이 처한 국내외적 상황과 문제에 대해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은 확인할 길이 없다. 심장병과 당뇨병은 김일성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유전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구체적인 병명 및 심각성은 불명확하

다. 만약 김정일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이는 체제 안정에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승계체제를 구축해왔기 때문에 김정일에 도전할 만한 세력은 모두 제거된 상태라고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김정일에 도전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거나 김정일체제가 교체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김정일체제에 대한 전망

서방 세계의 기준에서 볼 때 김일성 사망 후 2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도 국가 주석직과 당 총서기직이 공석으로 있는 것은 이상하다. 그리고 김정일은 지난 2년간 공식 행사에서 군 부대 방문과 군 행사에 참여하는 빈도가 매우 높다. 더욱이 군부가 한반도에 전쟁이 임박했다는 것을 공식 성명어로 발표하고, 또한 정전협정의 핵심 사항인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등 호전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과연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군부가 움직이는 것인지, 군부의 압력으로 김정일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김정일의 권력 기반은 매우 탄탄한가?

서방 세계의 북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것에 비해 이들 외교관들은 거의 모두가 김정일이 당·정·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 20여 년간 승계체제를 구축해왔기 때문에 김정일에 도전할 만한 세력은 모두 제거된 상태라고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김정일에 도전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거나 김정일체제가 교체될 가능

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즉, 김정일의 권력 승계 기반은 김일성 사망 이전에 사실상 구축되었으며, 오랜 기간에 걸친 선전 사업으로 북한 주민들도 부자세습체제를 인정하고 있다. 가족 내부 구성원간에 갈등이 있다는 보도가 있으나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일성이 김영주를 복귀시킨 것은 김정일에 대한 후견 역할을 맡기기 위한 것이며, 김영주는 이미 나이도 70이 넘는 고령이며 김정일과 경쟁 관계에 있던 70년대와는 여건이 상이하다. 또한 김평일의 권력내 서열은 국장급에 불과하고 정치적 영향력도 미미하며 군부내 영향력이 있다는 것도 과장된 분석이라고 본다. 그리고 김성애의 당내 지위도 아직 하위직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외교관들은 김정일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김일성 사후 지난 2년 이상 국가 주석직과 당 총서기직을 공석으로 남겨두고 있는 점에 대해 크게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김정일이 이러한 직책을 차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부리하게 공식 승계를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김정일이 이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김일성에

향후 김정일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시기에 북한 정권의 권력 구조는 김정일 단일지도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즉, 김정일이 당·정·군의 실권을 장악하는 것은 물론, 당·정·군의 3 개 최고위직을 겸직할 가능성이 가장 크나, 원로를 대우하고 지도층 내부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주석직을 타인에게 할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물론, 후자의 경우에도 집단지도체제라기 보다는 단일지도체제의 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대한 열렬한 추모를 통해 효심을 과시하고 북한 주민들의 김일성에 대한 충성을 자신에 대한 충성으로 전환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일성 정권 말기부터 악화된 경제가 수해로 인해 더욱 피폐해져 주민들의 생활이 비참한 상황에서, 화려해야 할 공식 승계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고 본다.

북한에 17 년 이상 생활한 어느 외교관은 김정일이 국정의 주요 사항을 모두 결정하고 있으며, 아무도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정일이 당·정·군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인민무력부장 최광을 제외한 거의 모든 혁명 1세대들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예우 차원에서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였다. 과거에도 최용건, 김일 등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으나, 현재 남아 있는 혁명 1세대(박성철, 이을설 등)들은 빨치산 운동을 하던 시절에 하급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 깊이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물론, 김정일은 이들의 조언이나 건의가 있는 경우 이를 경청하겠지만

반드시 구속을 받지는 않는다고 본다. 현재 북한에 서는 혁명 1세대보다 훨씬 젊고, 김정일의 측근인 김용순, 홍석형, 강석주, 오극렬, 김광진, 장성택, 김정우 등이 국가의 주요 정

책 결정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외교관들은 국내외 정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노력이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김정일이 국정을 제대로 장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정책 결정 과정이 매우 느리기 때문이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북한 관리들은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기 위해 상관에게 모든 결정을 미루는 경향이 매우 강하므로 상관의 결심을 얻어내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급 관리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상관으로부터 허락받는데 또한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왜냐하면 상관이 매사에 결정해야 하므로 허락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급자의 건의없이 상관이 직접 지시하는 일은 즉각 처리될 수 있다.

향후 김정일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시기에 북한 정권의 권력 구조는 김정일 단일지도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즉, 김정일이 당·정·군의 실권을 장악하는

것은 물론, 당·정·군의 3개 최고위직을 겸직할 가능성이 가장 크나, 원로를 대우하고 지도층 내부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주석직을 타인에게 할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물론, 후자의 경우에도

집단지도체제라기 보다는 단일지도체제의 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김정일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한다고 해서 권력 엘리트의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김정일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후, 숙청 작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으로 혁명 1세대는 점차 정치 일선에서 퇴진하고 과도기적으로 제2세대(60대)를 주류 세력으로 하고 제3세대(50대)를 보완 세력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후, 중장기적으로는 김정일세대(제3세대)를 중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제3세대는 주로 김정일 친인척을 비롯하여 만경대혁명학원 출신, 3대 혁명소조 지도자, 김일성종합대학 출신 등으로 구성될 것이다. 앞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인물은 외교 및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김용순, 김영남, 황장엽, 강석주 등이며, 경제 문제에 있어서 홍석형, 김정우, 김달현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군부 내에서는 김광진, 오국렬, 조명록, 이봉원 등이, 그리고 대내 문제에 있어서는 장성택 등이 핵심 인물이 될

김정일체제가 공식적으로 등장하더라도 북한 당국은 기본적으로 김일성 노선을 답습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아들이기 때문에, 김일성체제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일부 면담 인사는 명분상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정책 노선을 견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현대화와 개방·개혁 정책을 수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것으로 전망한다.

김정일체제가 공식적으로 등장하더라도 북한 당국은 기본적으로 김일성 노선을 답습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평양에 근무했던 외교관들이 모두 동의하는 점은 김정일은 김일성의 아들이기 때문에, 김일성체제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즉, 김정일은 김일성체제를 부정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당 기간 ‘김일성없는 김일성체제’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 면담 인사는 명분상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정책 노선을 견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현대화와 개방·개혁 정책을 수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김정일은 김일성 노선의 잘못된 점을 잘 알고 있는데 이를 주민들에게 얘기하기는 어려우나 자신의 측근들에게는 김일성 노선의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자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런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김일성 생전에 이미 對서방·대남 관계 개선으로의 방향 전환 및 대외 개방을 위한 정책 기초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

앞으로 2~3 년이 김정일체제의 안정에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으로 보는데 특히, 경제 문제 해결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며, 또한 대외 경제 개방 정책 추진에 따른 권력층 내부의 갈등은 물론 체제 내부의 모순을 해결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에, 김정일은 융통성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내부 결속 및 체제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둔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미 관계 개선에 역점을 둘 것이라는 것이다. 체제 안정 및 대외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 후 본격적으로 개방 지향의 새로운 경제 정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김정일체제가 견고화되려면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하고 미국과 관계 개선을 이루어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권력층 내부의 결속이 필요하고 또한 김정일의 건강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2~3 년이 김정일체제의 안정에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으로 보는데 특히 경제 문제 해결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며, 또한 대외 경제 개방 정책 추진에 따른 권력층 내부의 갈등은 물론 체제 내부의 모순을 해결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경제 정책의 방향

김정일체제가 당면한 최대의 현안은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는 것이다. 자존심이 강한 북한 관리들이 스스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제 사회의 경제 원조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지난해에 600 년만에 겪는 최대의 수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또한 올해에도 17억 달러에 달하는 수해를 입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대규모 홍수와 함께 집단 농업 방식에 따른 낮은 생산성, 전력과 원료 부족으로 인한 비료와 농약 생산의 감소, 수리 시설의 미비 등 구조적인 문제가 겹쳐 만성적인 식량 부족 현상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최근 배고파 남한으로 귀순하는 북한 병사들과 주민들이 잇따르고 있다. 국제 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 외부 지원이 없는 경우 당장 수백만 명이 심각한 영양 실조에 빠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제적십자사를 비롯하여 유엔 인도주의사무국 등 국제 기구와 여러 나라들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과연 북한 당국은 식량난을 비롯하여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북한 경제가 90년대 이래 6 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난은 김정일이 김일성으로부터 물려 받은 유산이다. 1993년 12월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이례적으로 3차 7개년계획(1987~93년)이 목표 달성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향후 3 년간(1994~96년)을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완충기로 설정하

고, 신경제 전략으로 3대
제일주의 정책(경공업·농
업·무역제일주의)을 채택
하였다. 즉, 생활 필수품
품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전의 중공업 우선 정책에
서 경공업제일주의로 전환

함과 동시에 식량난을 해결하고 대외 경제 기
반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제일주의와 무역제
일주의를 채택하였다. 더욱이 1994년 7월 김
일성 사망 직전에 자신이 직접 경제 일꾼들을
불러 보아 놓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경
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심하게 독려했다. 그러
나 김일성 사후에 북한은 1995년과 1996년
에 연이어 엄청난 수해를 당하고 신경제 정책
의 성과가 부진하여 경제적으로 더욱 파쇄해
지고 있다.

그런데 모두가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
고 있는 점을 부정하지 않으나,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식량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부 아프리카 국가의 기
근 사태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형편이라고 평
가한다. 또한 중국이 대약진운동 후인 1952
~62년경에 겪은 기근에 비하면 나은 편이라
고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에 지
금 굶어 죽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다고 전언하
였다. 북한 주민들 가운데는 영양 실조 상태
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바, 병에 걸

북한의 대외 원조 획득 정책은 커다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북한은 과거에 러시아,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에 의존
하였으나 이제 한국, 일본, 미국 등 서방 세계로부터
원조를 얻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 당국이 극심한 식량난을 당하여 실리 위주의
대외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한국과
일본의 원조를 받아들인 것은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리는 경우 견뎌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발
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 당국은
식량난이 '미제국주의자' 들이 남한의 식량을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하면 배불리 먹
을 수 있으므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통일을 위
해 힘쓰자고 주민들에게 선전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식량난이 냉해, 홍수 등 자연 재해
로 인한 전세계적인 현상임을 강조하면서 분
가항력임을 선전하고 있다.

지난해에 북한은 대규모 홍수가 있기 전에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각각 50만 톤과 15만
톤의 식량을 무상이나 유상으로 원조를 받았
고, 수해를 당한 후에는 식량과 의약품 등에
대한 원조를 요청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한
해 동안 85만 톤의 곡물을 외국으로부터 원
조받았고, 금년 초까지 약 2,800만 달러에
상당하는 원조를 다른 나라와 국제 기구로부
터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외 원조 획득 정책은 커다란 변화를 보여주
고 있다. 첫째, 북한은 과거에 러시아,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에 의존하였으나 이
제 한국, 일본, 미국 등 서방 세계로부터 원

북한의 경제 회생 여부는 대외 경제 개방 정책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자체적으로 투자 자본을 마련하고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력을 향상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야만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개방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하고 있다.

조를 얻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러시아는 구 소련 연방이 해체된 후 대북 원조가 거의 중단된 상태이고, 중국의 경우 최근까지 우호 가격에 의한 원유 및 곡물 등의 대북 원조를 삭감하고 국제 가격에 의한 경화 결제를 요구했으나, 완전 시행을 보류하다가 최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2만 톤의 곡물을 지원한 데 이어 10만 톤의 곡물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작년에 북한이 85만 톤의 외국 곡물 원조 가운데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75%에 해당하는 65만 톤의 식량을 획득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중국, 일본 등 인근 국가들이 북한의 최대 원조국으로 등장하고 있다. 둘째, 북한 당국이 극심한 식량난을 당하여 실리 위주의 대외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한국과 일본의 원조를 받아들인 것은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일시적인 것인지, 대외 정책 기초의 변화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두고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성과를 거두는 경우, 북한 당국이 기존의 자력갱생의 주체경제 수립이라는 목표를 변경하게 될 것이

라고 전망한다.

북한 당국이 대내적으로도 식량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바, 1994년경부터 농업 생산 단위와 공업기업소를 통

합하는 연합기업소를 설치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최근에는 농업 생산에 있어서 분조책임제를 도입하였다. 중국의 경우, 대련에서 집단농장체제 하에서 시장 경제적 요소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적이 있다고 한다. 북한도 이런 방식을 모색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그런데 최근 북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농민 시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80년대 초반에 도입된 것인데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새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미 북한 당국은 80년대 초에 주민들이 집 주변에 채소나 과일 등을 재배하거나 닭, 오리 등을 사육하여 농민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가 농민 시장이 너무 확대되자 부작용을 우려하여 중단시킨 바 있다.

북한의 경제 회생 여부는 대외 경제 개방 정책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자체적으로 투자 자본을 마련하고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력을 향상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야만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개방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하고 있다. 1982년 김 일성이 중국을 방문하여 경제 개방 지역을 돌아본 후, 김정일이 다시 중국의 경제 특구를 살펴보고 나서 개방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각

도 당비서와 행정지도위원장 등을 파견하여, 중국의 경제특구 개방 방식을 알아오도록 한 후 합병법을 제정하고 개방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개방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다. 당시 북한 지도자들은 “신선한 바람외에 보기, 파리 등이 들어오므로 방충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 당국이 1991년 12월 나진·선봉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한 후 30여 개의 외자 도입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서방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약하다. 1996년 4월 북한 관리는 나진·선봉경제특구를 대상으로 금년 초까지 40여 건, 3억 5,000만 달러 상당의 외국인 투자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투자액은 20 건, 3,50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비록 나진·선봉을 방문한 외국 기업은 50 개가 넘고 투자 고려 대상 사업도 수백 건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이 조사 단계에 있다. 실제 외국인 투자 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AT&T社의 북미 직통 전화 개통, 시피코국제 교역이 연변 용흥집단공사와 합작으로 하고

최근 김정우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4월에 미국, 7월에 일본과 홍콩에서 각각 대외 경제 정책과 나진·선봉경제특구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고, 또한 오는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UNDP와 공동 주관으로 한국 기업을 비롯하여 외국 기업을 초청하여 나진·선봉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많은 이들이 북한 당국은 개방에 따른 후유증을 염려하여 매우 신중히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제 특성상 급격한 개방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있는 빌딩 건설 공사(350만 달러), ING - 동북아시아은행(200만 달러) 설립, 페레그린 - 대성개발은행(750만 달러) 설립, 중국 기업의 나진-원정리 도로 공사와 통신용 광케이블 공사, 러시아 기업의 나진항 비료중계장, 나진호텔 건설, 대우의 남포공단 투자(512만 달러) 등에 불과하다.

최근 김정우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4월에 미국, 7월에 일본과 홍콩에서 각각 대외 경제 정책과 나진·선봉경제특구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고, 또한 오는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UNDP와 공동 주관으로 한국 기업을 비롯하여 외국 기업을 초청하여 나진·선봉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많은 이들이 북한 당국은 개방에 따른 후유증을 염려하여 매우 신중히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제 특성상 급격한 개방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북한이 장기적으로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개방과 개혁의 길을 갈 것인지, 북한 특유의 개방 방식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북한 관리들은

북한의 개방과 개혁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김정일일지도 모른다. 그가 김일성의 주체경제를 비판하거나 기존의 노선을 벗어나 본격적으로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 당국은 여전히 시장 경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개혁없는 제한적인 개방만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김달현, 김정우를 비롯한 일부 북한 경제 관리들은 시장 경제를 이해하고 있으며, 여건이 성립되면 시장 경제 운영 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북한이 중국과 같은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부정 부패를 비롯하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후유증을 감수하고 개방을 추진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후 개혁을 추진해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런데 북한의 개방과 개혁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김정일일지도 모른다. 그가 김일성의 주체경제를 비판하거나 기존의 노선을 벗어나 본격적으로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 당국은 여전히 시장 경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개혁없는 제한적인 개방만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김달현, 김정우를 비롯한 일부 북한 경제 관리들은 시장 경제를 이해하고 있으며, 여건이 성립되면 시장 경제 운영 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북한 경제의 장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3 년간은 경제적으로 견딜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중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지원과 함께 서방 세계와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대북 교역 및 투자가

활발해지는 경우 북한 경제가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경제 개방을 위한 외부 환경의 조성 and 체계적인 이론의 확립 등 내부 준비에 10 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성급하게 비판론을 제시하는 것은 속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회의적인 시각에 의하면 북한의 경제난은 사회주의경제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현재 북한의 경제 정책으로는 쉽게 해결하기가 어렵고, 특히 정치적인 이유에서 집단농장의 점진적인 해체와 같은 농업 개혁을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업 생산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으며, 더욱이 시장 경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개방 정책이 성과를 올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중국의 등소평이나 베트남의 구옌 반 린이나 보반 키에트와 같은 개혁 리더십이 등장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개방과 개혁이 불가능한데, 현재로서는 북한에서 이런 개혁 리더십이 등장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 경제

의 장래는 밝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난이 사회 통제와 정치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

이 있다. 비록 경제난으로 인해 사회 통제가 약화되고 탈북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 정치적 불안은 야기시키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난이 단기적으로 엘리트의 모반이나 주민 봉기를 직접적으로 야기시킨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저항 엘리트나 주민들의 불만이 조직되어야 하는데 북한에서는 아직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어쨌든 엘리트 모반이나 자연 발생적인 주민 봉기는 쉽게 진압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자금의 제한적인 대외 개방 정책이 확대되어 본격적인 개방이 실시되면 북한의 모순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반체제 인사나 세력이 점차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와 같은 매우 제한적인 개방은 아직 정치적 불안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철저히 통제된 사회이기 때문에 평양의 외교관들이 북한 주민들의 불평을 들은 적이 거의 없다. 북한 주민들은 서로 상대방을 의식하고 말하기 때문에, 평양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이 주민들의 솔직한 얘기를 듣기는 매우 힘들다. 이처럼 북한 당국은 여전

북한의 대외 정책이 아직도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에 매달려 있다고 보기 힘들며, 오히려 실용주의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외교 기초의 핵심은 미국과 정치적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일본, 독일을 비롯하여 서방 세계와 경제적 관계를 수립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음으로써 미국으로부터 recognition을 받아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을 타개해나가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히 경제난이 사회 통제와 정치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대외 관계 동향 및 전망

북한의 대외 정책이 아직도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에 매달려 있다고 보기 힘들며, 오히려 실용주의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 당국이 여전히 사회주의 정치 이념에 매달려 있다면, 어떻게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물론 사회주의 정치경제체제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계속 유지해나올 수 있겠는가?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주의체제를 전환시키는 데 몰두하고 있는 헝가리를 비롯하여 다른 동구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대외 정책이 실용주의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북한의 외교 기초의 핵심은 미국과 정치적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일본, 독일을 비롯하여 서방 세계와 경제적 관계를 수립하려는 것

사회주의권의 붕괴 후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북한의 김정일체제는 중국의 지지가 체제 안정에 긴요하기 때문에 북중 관계를 긴밀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對中 관계 강화 노력은 북한이 장차 대미·대일 관계 개선을 이룬 후에도 사회주의체제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다.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음으로써 미국으로부터 recognition을 받아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을 타개해나가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대미 평화협정 체결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북한이 독립된 국가로 승인받게 되면, 미국 기업의 대북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일본은 물론 서방 세계 국가들이 잇달아 북한을 승인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 결국,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미국의 점진적인 대북 관계 개선 정책을 수용하려는 입장보다 대미 평화협정 체결 노력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를 통해 대미 관계 개선의 길을 열었다. 북한은 핵 활동 동결만으로 대미 관계 개선을 약속받았고, 또한 경수로와 대체 에너지 등을 얻었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先 대미 관계 개선, 後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기본 입장을 계속 견지해나갈 것이다. 북한이 한미 양국의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을 위

한 4자회담을 수용하지 않고 여전히 미국을 상대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은 대미 관계 개선에 진전이 있을 경우, 대일 수교 교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또한 일본이 대북 수교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북한에게 쌀을 제공했으며, 최근에는 일본 정치인들과 관리들의 북한 방문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북경에서 북일 비공식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은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4자회담이 성립되는 시기에 북한과 수교 협상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일본은 과거의 정당 채널을 통한 대북 접촉을 버리고 정부 주도로 대북 수교 협상을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 후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북한의 김정일체제는 중국의 지지가 체제 안정에 긴요하기 때문에 북중 관계를 긴밀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년 초에 홍성남 부총리가 방중하여 양국간에

「경제 및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과거와 같은 우호적인 조건으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식량 및 에너지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심각한 식량 부족 현상을 우려하여 즉각 2만 톤의 곡물을 제공하고 이어 10만 톤의 밀을 추가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는 북한의 위기 상황에 처할 경우 중국의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그런데 북한의 對中 관계 강화 노력은 북한이 장차 대미·대일 관계 개선을 이룬 후에도 사회주의체제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은 북한을 이념적 동조자, 안보를 위한 완충국, 한국 경제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계속 지원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자국의 경제 발전과 정치 안정을 위해 북한체제의 안정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정일체제를 계속 도와줄 것이다. 비록 김일성 사망으로 혁명 1세대간의 유대 관계가 약화되는 한편, 중국이 한국과 정치·경제적인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당분간 북중 관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북중 관계가 과거의 특수 관계에서 점차 정상적인 국가간의 외교 관계로 변화해나갈 것이다.

북한은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소련 연방 해체 후 이미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과거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정치·군사적 동맹 관계에서 일반적인 외교 관계로 전환되었다. 북한은 지리적으로 멀지 않고 천연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에 진출하기 위해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소련 연방 해체 후 이미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과거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정치·군사적 동맹 관계에서 일반적인 외교 관계로 전환되었다. 예를 들면, 과거 북한의 상당히 많은 군인들이 구소련의 프룬제 아카데미 등에 유학을 한 적이 있으나, 구소련의 해체 후 거의 군인사 교류가 중단된 상태이다. 그리고 이미 양국은 오는 9월에 만료되는 기존의 우호 동맹 조약을 일반적인 우호 친선 조약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러시아는 한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해오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북한을 소홀하게 다루었으나, 앞으로 양국은 경제 분야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북한은 지리적으로 멀지 않고 천연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에 진출하기 위해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1991년 당시 연형묵 총리가 태국과 필리핀 등을 방문하여 외교 관계수립에 합의하였으며, 북한의 고위 관리들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베트남, 라오스 등을 방문하여 원유, 고

무, 쌀, 광물 등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작년에 이성대 대외경제위원장이 태국을 방문하여 쌀 30만 톤의 구매에 합의한 바 있으며, 태국의 경제사절단이 나진·선봉을 방문하여 통신 시설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북한은 대만에 무역사무소를 개설하고 관광객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동남아 지역이 북한 경제 외교의 주요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의 외교는 이러한 실용주의적 측면과 함께 종래와 같은 사회주의 외교 행태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작년 가을에 콜롬비아에서 개최된 비동맹회의에서 북한은 박성철 부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여, 종래와 같이 비동맹 국가들이 서구 제국주의자들에 대항하여 반식민지 운동을 전개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북한은 일본이 비동맹회의에 옵저버의 자격을 얻으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저지한 결과 성공하였다. 일본은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비동맹 국가의 지지를 얻기 위해 옵저버의 자격을 신청했으나 북한의 적극적인 반대로 실패하였다. 당시 일본은 대북 무상 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러한 태도를 보여준 데 대해 일본 외교 실무자들의 북한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대단했을 것이라는 점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대남 정책 전망 및 한반도의 장래

김영삼 정부 출범후 남북 관계는 변화 무쌍하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 직후 정부는 한국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수십 년 동안 미전향자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뒤 건강이 좋지 않은 이인모 노인을 북한에 되돌려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남북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는 극단적인 외교 전략을 통해 IAEA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대북 특별 사찰 압력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북한을 NPT에 잔류시켜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북 직접 협상에 나섰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남북간에 합의한 비핵화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북한과 특사 교환을 위한 예비 회담을 열었으나, 북한의 대미 직접 협상 전략으로 아무런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빈번히 좌절되었다. 1994년 6월 카터의 중재로 교착 상태에 빠진 핵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김일성이 핵 동결과 함께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여 남북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정상회담은 무기 연기되어버리고 김일성에게 조문 사절을 보내야 한다는 야당 인사의 주장에 정부가 오히려 김일성에게 한국전쟁의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묻자, 북한 당국이 김영삼 정부를 비

난하고 나섰다. 결국, 1994년 10월 북미간에 핵협상이 타결되어 북한의 핵 농결에 대한 보상으로 경수로와 대체 에너지를 제공하고 향후 북미간의 관계 개선을 추진한다는 제네바합의가

이루어졌다. 북한이 처음에는 한국형 경수로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취하다가 결국 수용하기로 태도를 바꾼 후, 1995년 6월 김영삼 정부가 북한에게 15만 톤의 쌀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 관계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뜻밖에도 북한에 쌀을 실어 나르는 배에 인공기를 게양하도록 북한 당국이 강요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어 사진 촬영을 한 한국 선원을 대상으로 스파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배를 억류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남북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더욱이 북한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하려는 의도 하에서, 1996년 4월에는 정전협정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의무를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판문점에서 군사적인 행동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정전협정 무력화 책동에 대응하여 한미 양국이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제안하였다. 북한은 4자회담 수용 여부에

냉전이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여전히 제한적인 경제 교류 속에 대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남북한간의 상호 불신이 관계 개선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구조적인 문제로서 다방면에 걸친 남북한간의 불균형이다. 결국, 북한은 남북한 불균형에 따른 불안감이 해소되어야 진정한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앞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려면 매우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남북한 정부 당국자간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대북 경수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소수 한국 기업의 대북 교역과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냉전이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여전히 제한적인 경제 교류 속에 대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남북한간의 상호 불신이 관계 개선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양안 관계가 정치적으로는 어려우나 경제 교류 및 협력은 매우 활발한 점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충고한다. 최근 북한에서 남한으로 귀순한 인사들의 얘기가 남북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면이 있다. 특히, 북한에서 남한으로 귀순한 사람들의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귀순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한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특히, 이들은 남한 사회에서 생존해나가고 대접받기 위해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크게 인정을 받고 있는 입장이므로 북한에게 아량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우위에 있으므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의 경우, 구서독 정부가 구동독 정부를 경제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구동독 주민들은 구서독처럼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하기 힘들면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북한을 지원해야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과장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최근 임진강을 헤엄쳐 귀순한 북한 제대 군인의 경우 배가 고파 탈출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장시간 수영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려면 결코 그동안 심하게 굶주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남북한 관계 개선이 잘 안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의 하나는 다방면에 걸친 남북한간의 불균형이다. 결국, 북한은 남북한 불균형에 따른 불안감이 해소되어야 진정한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앞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려면 매우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제 남한이 북한과 접촉을 확대하고 지원을 해주어야 북한 주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남 인식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자기 마을을 방문하는 교포들이나 해외 여행에서 돌아온 이웃을 통해 외부 세계의 실상을 알게 된다. 예를 들면, 남한 학생운동단체의 대표로 북한에 밀입국한 바

있는 임수경이 김책공대를 방문하여 컴퓨터실에 안내를 받았을 때, “우리 집에도 컴퓨터가 있다”고 얘기하자 동행한 북한 학생들이 매우 놀랐다는 얘기가 있다. 이처럼 남한의 대북 접촉 확대가 대한민국의 실상

을 북한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것이다.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크게 인정을 받고 있는 입장이므로 북한에게 아량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우위에 있으므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의 경우, 구서독 정부가 구동독 정부를 경제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구동독 주민들은 구서독처럼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도 정부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하기 힘들면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북한을 지원해야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이 각각 제시하고 있는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과 「연방제 통일 방안」은 비슷한 점이 많으므로 타협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남한의 언론인이 중국 지도자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도 중국이 주장하는 ‘一國二制’ 방식의 통일 방안을 참고해

야 할 것이라는 견해는, 결국 연방제와 비슷한 방식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가 아닌가?

지난 4월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공동으로 제안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4자회담은 필요하다. 그러나 성사 여부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북한은 4자회담을 열기 전에 미국이 대북 경제 제재의 완화 등 가시적인 관계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미국은 아직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결심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이 북한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협상을 하는 경우, 북한에게 제시할 수 있는 몇 개 남지 않은 협상카드이기 때문에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우 기존의 북미 양자간의 평화협상 주장에 비추어 보면, 4자회담을 거부해야 하나 대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4자회담을 수용해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변형된 4자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한은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한국 정부가 보여준 비우호적인 태도에 대해 아직도 비난을 퍼붓고 있으며,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미가 제안한 4자회담을 수용하여 협상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북한

은 체제의 특성상 지도자의 결정에 의해 얼마든지 기존의 입장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4자회담의 성사 여부를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서로 자신의 국가 이익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대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익의 우선 순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세계 전략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본과 중국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이라는 맥락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북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統**